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분리되면

# ‘싱크 탱크’ 역할 위축... 상생발전 역행

## 광역도시-농촌, 행정특성 달라 분리론 제기 예산 크게 줄어 연구인력·기능 축소 불가피

광주전남발전연구원(광전연) 분리 운영은 그동안 시도 행정의 두뇌기능을 해온 연구원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도가 연구원을 따로 따로 운영할 경우 당장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분리론 왜 나왔나=분리운영론은 시·도 행정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즉 광주시는 광역도시행정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전자, 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한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수도 조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농수산업과 해양관광문화자원 개발, 고령화사회에 따른 복지시책 추진이 주된 행정분야다. 또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프로젝트)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조선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이 도정 역점시책으로 채택되면서 광주시와 공동운영하던 광전연의 분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현 연구원 총 운영자금 237억여원 가운데 기관 출연금 186억 1천만원 중 전남도(28억원)와 22개 시·군(79억 6천만원)은 전체의 58%인 107억 6천만원을 출연했다. 따라서 전남도 입장에서는 전체 출연금의 58%를 내놓고도 광주시와 공동운영하는 데서 오는 불만과 연구원이 분리되더라도 충분히 독자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분리운영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도의회는 회기가 열릴 때마다 ‘행정특성’을 강조하며 독자운영을 촉구해 왔다.

▷상생발전이 역효과=분리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상생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이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특성이 부각되는 접면을 들어 분리운영하는 데서 오는 폐해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시·도의 연구원 분리 운영시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해 사안별로 갈등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 압박 가중=지난 2006년 광전연 운영비는 23억여원, 출연금과 자체 적립금 51억여원과 출연금 186억여원을 합한 237억여원의 이자수입 및 전년도 미집행이월금 6억여원, 수

-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연혁**
- ▲1991. 12. 20 전남발전연구원 개원
  - ▲1991. 12. 20 초대 김동환 원장(전 광주광역시시장) 취임
  - ▲1992. 12. 07 전남발전연구원 육성조례 제정
  - ▲1995. 06. 12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육성조례 제정
  - ▲1995. 06. 20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범
  - ▲2003. 07. 14 청사 이전(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 ▲2004. 02. 12 광주전남지역학술회의 사무국 지정
  - ▲2004. 11. 15 광주전남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개소
  - ▲2006. 01. 02 제9대 오재일 원장
- (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취임)

탁 용역 적립금 등을 포함한 액수다. IMF 이후 광전연의 운영난은 심각하다. 기금의 이자수입이 IMF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광전연의 운영비 대부분은 연구직 13명과 일반직 10명 등 23명의 인건비와 경상비로 사용된다. 따라서 새로운 독자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도 분리 운영의 경우 문화, 사회복지, 행정 평가분석 등 중복 인력분야가 70%에 이른 것으로 분석돼 예산낭비 소지도 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구원이 분리되면 시·도는 재정에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연구인력 30명 규모의 연구원을 운영할 경우 최소 연 40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광주·전남이 분리해 독자 운영하면 연 8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예산을 줄이려면 연구인력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연구 기능도 쪼개진다.

연구원을 통합 운영할 경우 30~40명 연구인력 규모이면 비슷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광전연의 경우 위탁 기금에 대한 12억원의 이자수입(이율 5% 기준)이 있기 때문에 30명 규모의 연구원을 공동 운영할 경우 시·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간 합의로 분리가 결정된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전경.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광전연은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돼 10여년 이상 광주·전남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해왔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젠 實利다 (3)기업 내뿜는 노사분규

# 중국으로 동남아로 생산공장 ‘엑소더스’

수년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해온 A사가 사무실만 남겨놓고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현지 생산을 거쳐 현지기업에 납품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직원들의 임금을 견디다 못해 ‘국내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 하남산단 탈출 줄이어

A사의 이전을 앞뒤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A사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중국 또는 베트남 등지에 생산공장을 짓는 ‘엑소더스’ 현상이 줄을 이었다.

B모씨는 지난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협력업체를 인수하려다 손을 떼고 말았다. 그런대로 납품량이 있어 60여명의 직원들이 열심히만 해준다면 회사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으려니 했는데, 16년째 되돌아오고 있는 기아차 노조의 파업 얘기를 듣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여부를 먼저 묻는다”고 말했다. 최근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엔베스트 코리아’가 50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노사분규가 외국인 투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답이 68%에 달했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답까지 합치면 95%를 넘어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노사분규로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수년새 광주·전남지역의 분규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지방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65건, 2005년 18건, 2006년 12건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파업강도다. 16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운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올해 임금협상이라는 변수에다 비정규직 노조문제 등 불씨를 안고 있어 파업강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세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기아차 파업 벌써 걱정

이에 대해 지역협력업체들은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남산단내 A업체 대표는 “솔직히 생산설비나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기아차 광주공장이 파업해버리면 우리가 거덜나기 때문에 염두가 나지 않는다”면서 “여유만 있다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산단내 사업주들의 얘기가 얼마만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경총 관계자는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법 노사분규는 이제 끝내야 한다. 미국의 GM, 영국의 브리티시 레이랜드, 일본의 닛산 등이 노조의 제 몫 찾기에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거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4~5대 광주시교육감을 역임한 김원본 전 교육감이 8년의 재임기간 중 재산을 6억원 이상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임기만료로 퇴직한 김 전 교육감의 재산은 토지 8천393만5천원, 건물 3억1천3만9천원, 예금 8억5천815만2천원, 채무 5천500만원 등 모두 11억9천712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998년 11월 취임 후 1999년 1월 재산등록사항을 공고하면서 토지 8천393만5천원, 건물 1억1천27만4천원, 예금 2천707만1천원, 채무 1천700만원 등 총 2억7천419만4천원이라고 밝혔다. 또 1999년 2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교육감 취임에 따른 퇴직 일시금과 교원공제회 예치금 등 3억774만6천원 등을 추가, 재산이 5억9천742만2천원

# 김원본 前광주시교육감 재임 8년간 재산 6억원 이상 불렀다

으로 늘었다. 김 전 교육감의 취임 당시 재산 총액인 셈이다.

김 전 교육감의 퇴직금 등이 포함된 1999년 2월과 퇴직 후인 2007년 1월 각각 신고한 재산 변동사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토지의 경우 고향인 장성군 일대의 논·밭·임야 등 본인 소유 8건에 8천393만5천원으로 건수와 액수 모두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취임 당시 본인 소유의 북구 흥흥동

단독주택(7천277만4천원)과 용봉동 현대아파트 31평형(3천950만원) 등 2건에 1억1천277만4천원이던 것이 퇴직 후에는 중흥동 단독주택(7천277만4천원)과 서구 금호동 코아투아파트 50평형(2억3천726만5천원) 등 2건에 3억1천3만9천원으로 1억9천776만5천원 늘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3억5천29만9천원에서 8억5천815만2천원으로 5억785만3천원이 증가해 김 전 교육감 재산증식의 주된 수

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퇴직 일시금과 교원공제회 예치금 3억여원은 8년 동안 매년 수천만원의 이자수익을 가져다주면서 종자돈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교원공제회와 투자신탁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가 하면 금융기관을 바꿔가며 예금하는 등 테크도 실력도 발휘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취임한 안순일교육감은 본인 소유 건물과 예금·보통 2억9천585만6천원, 부인 명의 예금과 증권 3천301만4천원, 아들 예금 3천780만8천원, 딸 예금 4천192만6천원, 어머니 소유 서울 흥흥동 단독주택 1억3천200만원 등 모두 5억4천600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교육감 본인의 재산은 부동산보다는 금융 자산에 집중돼 눈길을 끌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 2007학년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CSO에서 사관까지 비즈니스 경쟁력을 위한 변화 방향과 인식 제고를 갖춘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시작하십시오.

신입생 모집	학원 소개	학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대상: 학부생, 대학원생</li> <li>▶ 모집기간: 1월 15일 ~ 1월 25일</li> <li>▶ 모집분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모집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특별자치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목적: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설립연도: 1991년</li> <li>▶ 설립형태: 사립</li> <li>▶ 설립자: 전남대학교</li> <li>▶ 설립목적: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설립연도: 1991년</li> <li>▶ 설립형태: 사립</li> <li>▶ 설립자: 전남대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학제: 학부, 대학원</li> <li>▶ 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li>▶ 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li> </ul>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